

Peter Banseok Kwon, *Cornerstone of the Natio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Modern Korea under Park Chung Hee*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24). pp. 448.

문만용†

20여 년 전 평생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한 공학자의 퇴직 기념식 때의 일이다. 한 청중이 “그동안 선생님이 개발한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느냐,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반성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 일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다. 다행히 노련한 그 학자는 “이순신은 일 본인 입장에서는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원흉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느냐”고 질문하며 자신의 연구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를 추스렸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연구는 그 속성상 가치 판단의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방위산업의 역사를 다루는 문제도 이같은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70년대 추진된 방위산업의 역사를 추적한 Peter Banseok Kwon(권반석)의 『국가의 초석』(*Cornerstone of the Nation*)은 매우 과감하고 중요한 저작이다. 뉴욕주립대 올버니 캠퍼스(*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필자 권반석이 2016년 하버드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The Anatomy of Chaju Kukpang: Military-Civilian Converg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under Park Chung*

---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mymoon@jbnu.ac.kr

Hee, 1968-1979”를 보강한 이 책은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앞뒤 표지를 비롯해 책에 포함된 수많은 자료 사진들은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매우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한다. 1970년대의 정치·경제나 사회 분야에 비해 그 시기의 과학기술을 다룬 영문 저서가 드문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책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한국의 근대화를 자주국방이라는 아젠다와 연결시킨 이 책의 핵심은 “군사주의와 근대화(militarism and modernization)” 혹은 “군사화된 산업화(militarized industrialization)”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6) 필자는 자주국방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었지만, 그것이 지닌 정치성 때문에 국가의 과학화, 기술 변화, 군사적 근대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이 담당할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속성상 자료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간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전모를 보이고자 했다. 실제 이 책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는 그 기관이 수행한 역할과 그것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 연구의 특성상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끌었던 심문택 소장이 2024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됨으로써 1970년대 국방과학 연구개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기대를 갖게 한다.

서론과 본문 5개 장,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된 『국가의 초석』은 정권의 담론에서부터 이를 구체화한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 그리고 이를 지원한 국민들의 희망에 이르기까지 당시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지형도를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서론에서 군사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한국 방위산업화의 핵심 특징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1장은 자주국방 정책의 배경으로 북한의 도발과 닉슨 독트린 등 당시 국내외 환경을 보이며, 이 속에서 박정희가 “총력안보(total security system)”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총력안보는 군과 민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출발점으로 한국 사회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러한 서술은 일종의 담론 분석으로 박정희가 내세운 정책과 그것이 지닌 의도를 그의 발언과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장은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지녔던 이중의 목적을 살피면서 중화학공업화와 방위산업의 결합을 분석했다. 자주국방을 위해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하고, 이는 강력한 정치적 파워가 없이는 안된다는 인식이 결국 유신체제로 이어졌음을 주장했다. 당시 테크노크라트 중 오원철을 비롯한 일부가 이같은 주장을 했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한 연구자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시선을 끈다.

3장은 방위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자료나 엔지니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문화의 군사화를 보이면서 재벌의 군사화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 국화약(현 한화)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방위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관련 기술 역량을 축적하면서 중화학공업화 속에서 자주국방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부상하는 과정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과 민간 기업의 결합으로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의 군사적 근대화 모델 또는 현재 “주식회사 대한민국(Korea, Inc.)”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력 형성의 뼈대가 구축되었음을 강조했다.

4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단순히 무기 개발을 관장하는 연구소를 넘어 기술과 노하우 확산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립을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였다. 또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방위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음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산업화 변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이라는 제한된 영역 외에 정보통신이나 우주개발까지를 포함한 한국 산업의 전반적 기술 향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무척 흥미롭다.

5장은 핵탄두 개발과 유도탄 개발을 양축으로 삼아 진행된 군전략 증강사업인 울곡사업을 다루었다. “국가 무기화를 위한 동원(Mobilizing to Weaponize the Nation)”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자주국방에 국민의 참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방위성금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인터뷰 등을 활용해 그들의 동참을 단순히 강압이나 동의가 아닌, 국가 안보를 우려한 국민의 의식과 연결시킨 설명은 “대중독재”를 비롯해 최근 이 시기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결론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아젠다 아래 추진된 정책과 그에 따른 전면적인 군사적·경제적 근대화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산이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유용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책은 군사화가 한국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발전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고통치자에서 테크노크라트, 현재의 엔지니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이 자주국방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

필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화학공업화가 지니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의미로 인해 그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제한적이었던 방위산업이라는 주제를 중화학공업화와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당시의 기술 및 사회의 근대화를 이해하려 한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중요하다. 자주국방의 아젠다가 단순히 무기생산이나 관련된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후 심층적 후속 연구의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 책은 사료 비판이라는 난제를 충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기밀 해제된 다수의 정부 문서를 비롯해 핵심 테크노크라트, 연구자, 기술자 등과의 인터뷰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에 따른 해석은 당시 박정희 정권 측의 주장의 근거를 강화,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정부 혹은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나 기관이 생산한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 유신체제까지 그 필요성을 연결하는 서술은 박정희, 오원철로 이어지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유신시대가 실제 작동했던 방식,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러한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민간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자주국방 아젠다에 대다수가 동의했고, 국민적인 방위성금 모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적극 참여했음을 주장했다. 실제 박정희 사망 때 대다수의 국민이 슬퍼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진술과 행위를 통해 그들의 판단과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모든 발언과 행동이 통제되던 유신 시대, 군사화된 권위주의 통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표면에 드러난 사료로 해석하는 것이 그 시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자주국방 아젠다에 국민들이 동의한 배경으로 애국심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제시했

는데(257), 이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자주국방이나 방위세에 대한 부정이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정치적 분위기에서 과연 그러한 언급이 가능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또한, 책의 서술로는 박정희 시대에는 국내외의 여러 간섭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 노력이 그의 구상대로 착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79년 박정희의 사망, 그리고 그 배경이 되었던 부마항쟁 등 당시의 사회·경제·정치적 불안정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불안정이 박정희의 유신체제 혹은 관련 정치·정책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남는다. 이에 대한 서술은 이 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오원철의 구상과 연결해 자주국방의 큰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오원철이 주도해 발표된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에는 각 분야별 공장설립계획과 함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을 위해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변화 문제까지 언급되어 있으나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나 연구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실제 당시 상공부는 새로운 연구소나 연구단지 건설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제2연구단지 건설을 최형섭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과학기술처가 준비했음을 볼 때 오원철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이 박정희의 자주국방이 남긴 성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신군부는 정권을 잡은 이후 핵개발과 유도탄 개발 등 자주국방과 관련된 성과를 상당 부분 사장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으려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인력의 대량 해고로 인한 백곰 프로젝트의 미계승이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을 떼고 한국에너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어렵게 살아남았던 상황은 그러한 시도의 결과였다. 이를 감안할 때 1980년대 상황을 자주국방 정책과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자주국방의 성과를 이후 시대까지 적용하려는 노력은 결론에서 이후 정부, 심지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까지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군사화된 근대”가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태는 한국이 “군사화된 근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령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재빠른 대처로 해제되었던 상황은 한국

이 1970년대의 군사주의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잘 보여준다. 이는 박정희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 틀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 책은 정부와 기업의 연계(government-business ties)가 박정희 시대의 중요한 작동 방식이었음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이후 한국 사회·경제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정경유착”과 얼마나 다른 개념인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평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자주국방과 연결시켰다. 이는 여러 학자나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정치한 해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결론에서 현재의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에서 일종의 “신총력안보태세(new total security posture)”가 필요함을 언급했는데(281),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의 젊은이, 혹은 보통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쉽게 시도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긴 필자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접근법의 하나이며, 특히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야 할 저작이 될 것이다.